

## 국가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인들과 대인 간 신뢰: 61개국의 자료 2차분석\*

나 은 영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국가투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차원들(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거리, 남성성-여성성, 및 불확실성 회피)과 대인 간 신뢰가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지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Hofstede(1991)의 53개국 문화차원 조사결과, Inglehart(1997)의 43개국 대인 간 신뢰 조사결과, 및 Transparency International (1998)의 85개국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결과 중 공통되는 국가들의 지수를 함께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국가투명성 변량의 66%와 대인 간 신뢰 변량의 57%가 4개의 문화차원으로 설명이 되었으며, 국가투명성 변량의 45%가 대인 간 신뢰로 설명이 되었다. 국가투명성을 가장 잘 예언하는 문화차원은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이었고, 대인 간 신뢰를 가장 잘 예언하는 문화차원은 권력거리(권위주의) 차원이었다. 한 국가가 더 개인주의적일수록,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불확실성 수용 경향이 클수록, 그리고 더 여성적일수록 국가투명성이 높았다. “대인 간 신뢰”의 매개 역할은 국가투명성에 미치는 개인주의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의 효과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권력거리는 국가투명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컸다. 집단주의와 권위주의가 합해진 문화권에서는 겉으로 표현된 내용 이면의 의중이나 내막을 유추해야 하는 고맥락(high context) 커뮤니케이션이 습관화되어 국가 투명성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투명성, 부패, 신뢰, 문화, 고맥락 커뮤니케이션

---

\* 이 논문은 2001년 5월 19일 한국언론학회 춘계학술대회(정치커뮤니케이션 세션), 그리고 2001년 10월 19일 정책기획위원회 전문가 초청 워크샵(전체주제: “신뢰”)에서 발표되었다.

국제 투명성 협회(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3년에 창립되어 1995년부터 나라별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산출하면서부터, 과거에는 투명성에 관심이 없던 나라들까지도 이제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빈곤과의 전쟁, 에이즈와의 전쟁, 환경오염과의 전쟁,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에 못지 않게 전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부패”와의 전쟁이다 (<http://www.transparency.or.kr> 참조). 부패(corruption)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것(the misuse of public power for private gain)”으로 정의된다(Eigen, 1996). 이 개념적 정의는 “사적(私的)”인 영역과 “공적(公的)”인 영역 간의 갈등이 부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적 영역의 사유화, 공사 구분의 모호함, 그리고 사적 연줄을 이용한 공적 업무의 처리 등은 모두 한국에서 흔히 나타나는 문화적 현상으로, 공적 영역에서까지 비공식적 대인관계망이 과도하게 이용됨으로써 부패가 합리화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

부패와 반비례 관계에 있는 투명성(transparency)은 정보의 액면 그대로의 공개를 의미한다. 즉, 겉에서 보이는 것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때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나 권력기관에서 대중에게 공개하는 정보가 사실과 동일하고, 모든 정보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달된다면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투명”한 것이다. 정치적 엘리트 집단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이 정보 가치를 그대로 지닌 채 일반 대중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고 수용될 때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기관의 “내막”이나 높은 사람의 “의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알짜배기” 정보는 따로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사람들은 “드러난 얼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박승관, 1994).

투명성의 개념적 정의는 “정보가 널리 균등하게 공유되며, 모든 일을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합리적인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Schulzinger, 2001). 이 과

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패의 씨앗이 자라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투명성의 결여나 부패 상황을 문화 속에 내재된 자연스러운 경향, 즉 일종의 용인된 관행(accepted practice)으로 보는 관점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추세는 이런 관점 자체가 부패 척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투명성이 결여된 국가는 부패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범세계적 경쟁에서 도태된다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척결하는 쪽으로 힘이 모아지고 있다(Hors, 2000 참조).

투명성의 결여는 이중성(duality)과 일맥상통한다. 왜냐 하면, 둘 모두 “겉과 속이 다르다”, “겉으로는 정보가 균등하게 전달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기업의 경영구조나 정치권력의 의사소통이 모두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건강한 자본주의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투명성의 결여”가 바로 ..... “문화 이중성” 또는 “이중적 문화”의 결과이다. 정경유착이나 폐쇄적 관료체제를 하는 것들이 모두 우리 문화의 이중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들이다.

- Na & Min, 2000, p. 114.

한국 문화의 이중성은 명시적·공식적 규범과 암묵적·비공식적 행동원리 간의 불일치, 즉 명시적·공식적 규범은 합리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면서도 암묵적·비공식적 행동원리는 여전히 비합리성과 불투명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있다. 비공식적 대인관계망에 의존하는 불투명한 의사전달 체계가 사회 전반에 불신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지니는 특성 중 “인정,” 그리고 아는 사람끼리 서로 돕는 정신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활용되어 아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자칫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불공정한 결과가 돌아가게 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즉, 사적으로는 “인정” 규범에 맞는 선택(예컨

대, 교통경찰관이 친구의 노부모가 교통위반을 했을 때 딱지를 떼지 않는 경우)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으로는 분명히 그 경찰관이 개인적으로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했을 행동에 비추어 불공정한 행동임에는 틀림없다(한규석, 2000 참조). 만약 친구 노부모에게 마저 냉정하게 불법 사실을 따져 물었다면 공정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인정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한국의 문화이다.

이와 같은 공사 구분의 모호함, 공정과 인정 간의 갈등은 나와 가까운 사람과 나와 먼 사람보다 더 잘 대하는 것, 내 아버지를 남의 아버지보다 더 섬기는 것이 당연시되어 온 유교문화의 전통과도 관련이 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나의 입장에서 동등한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전통의 분위기에서 공적 정보공개 형태와 사적 정보공개 형태의 불일치는 당연시된다. 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거나, 사적 관계를 이용하여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도 모두 관계지향 문화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관계를 악용하는 부패 고리로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로서 체면(face-saving) 압력과 동조(conformity) 압력의 폐해를 암시한 Na(1997)의 연구결과도 국가투명성이 문화적 요인과 관련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한 나라에서 의식개혁이 잘 이루어지면 그만큼 비합리적인 과정이 척결되고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Na(1997)가 밝혔듯이 행동까지 이어지는 의식개혁이 있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태도만 바람직하게 변화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바람직한 개인의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문화적 요인들의 여건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투명성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문화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것은 투명성 증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투명성이 결여된 의사소통 체계는 전통적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 양식의 습관화와 관련이

된다. 흔히 관계중심적 집단주의 문화에 팽배해 있다고 여겨지는 고맥락 의사소통(high context communication)은 겉으로 전달되는 내용 이외에 숨은 뜻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 있다 보면 실제로 숨은 뜻이 없는데도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순수한 의도로 말한 내용들까지 “공공이 속”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추론하는 습관이 형성된다. 따라서 “뇌물은 절대 안받는다”는 말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겉으로는 그래도 내심으로는 바라겠지”라고 잘못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또한 겉으로는 직장 상사나 윗사람에 대한 예의 또는 섬김의 표시로서 포장된 “선물”이나 “성의”가 그 이면의 속뜻이나 기능으로서 “뇌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도 고맥락 커뮤니케이션의 습관화로 인한 것이다.

결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내포한 상태에서 속뜻을 “미루어 짐작”하는 습관이 투명성의 확산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례를 발견하더라도 그것이 보편적이라고 믿지 않고 예외로 치부하는 경향은 불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는 집단주의 문화의 “고맥락” 커뮤니케이션 습관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권력기관 중 다수가 깨끗하고 소수가 부패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부패한 사례를 과일반화하고 다수의 청렴한 사례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은 바로 이처럼 “미루어 짐작”하는 커뮤니케이션 습관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규모 대인커뮤니케이션에서나 대규모 정치커뮤니케이션에서나 마찬가지로 행태로 나타난다.

고맥락 의사소통과 유사하게, 뜻한 바를 “간접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 예의바르다고 간주되는 커뮤니케이션 문화도 불투명성을 더욱 부추긴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직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갈등 상황에서 직접 대면했을 때의 민망함을 피하려 제3자를 경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다(Leung, 1987). 간접적 의사소통에는 듣는 사람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진다.

동양 문화권에서 부패지수가 특히 높은 것도 고맥락 의사소통 및 간접적 의사소통의 뿌리가 되는 관계지향 문화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 투명성 협회가 조사한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하위권이며, 특히 1998년에 추가로 조사한 뇌물수수 지수(Bribe Payers Index, BPI)는 가장 높은 3개국(중국이 1위, 한국이 2위, 대만이 3위) 중에 속한다(<http://www.transparency.de> 또는 <http://www.gwdg.de> 참조). 동양의 관계중심적 문화속성, 즉 관계를 해치지 않으려는 타인 배려의 문화가 오히려 오늘날처럼 거의 모든 정보가 국가 간의 경계까지 뛰어넘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상황에서는 “투명성의 결여”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배양하는 양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와 부패 간의 구체적인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들이 드물고, 학제간 과제이기에 더욱 이 학문과 저 학문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영역이지만 이런 시도가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전공영역의 국가 단위 자료를 종합하여, 국가투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로서 국가문화의 차원들과 대인 간 신뢰가 각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지니는지, 그리고 대인 간 신뢰 변인이 문화차원과 국가투명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61개국의 공통자료 2차분석을 통해 알아 보았다.

### 문화의 차원들(Cultural Dimensions)

Hofstede(1991)는 문화의 차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개인주의(individualism)-집단주의(collectivism) 차원은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 중 어느 것을 앞에 놓느냐 하는 차원으로서, 개인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면 개인주의, 집단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면 집단주의로 분류된다. 집단주의가 점차 개인주의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집단주의 사회의 구성원들 또는 리더들이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할 때, 과연 “명분”만 그러한지 실질적으로도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지는 좀 더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권력을 남용하는 그럴싸한 “명분”으로서 집단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더 호소력을 지닐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보다 앞서서 그 “집단”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핵가족 범위 밖의 보다 광범위한 큰 집단도 과연 “나” 또는 “나의 가족”의 이익이나 안위보다 중요시할 것인가?

Na와 Cha(2000)의 연구 결과는 한국 문화가 막연한 집단주의 성향보다는 핵가족 중심의 개인주의 성향을 강하게 지니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걸으려는 커다란 집단을 위한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중성과 부패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는 것이 집단주의 문화의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가정되어 있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가족이나 소규모 내집단을 넘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더 클 가능성이 있고, “집단”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나 아닌 다른 개인의 희생”을 명시적·암묵적으로 용인해 왔던(예컨대, 유교적 전통에서 문중이나 대가족 전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 여성의 희생이 강요되어 온 경우) 집단주의 문화가 개인주의화 되어 갈 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신뢰가 더 확보되기 어려울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권력거리(power distance)차원은 지위에 따른 불평등을 아래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연시하는가 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옛날 신분사회에서는 상민이 양반을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때의 권력거리는 큰 것이다. 권력거리가 큰 사회에서는 윗사람에게 이견(異見)을 제시하기가 어렵게 느껴진다. 위계(hierarchy)와 권위(authority)로 대표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Fukuyama & Marwah, 2000), 한국 사회에서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심지어 윗사람의 명시적 명령이나 요청이 없어도 아랫사람이 그 의중을 헤아려 눈치껏 알아서 살피야 하는 것이 관례로 통한다. 이런 특성들이 바로 권력거리가 큰 문화의 특성이기 때문에, 권력거리가

큰 권위주의 사회에서 부패가 자라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리더 하에서는 권위자가 있던 없던 관계없이 스스로의 자아존중감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바람직한 행동을 지속하는 데 비해, 권위주의적 리더 하에서는 권위자가 있을 때에만 처벌을 두려워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올리지만, 권위자가 없을 때에는 다시 권위자의 눈을 피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재개하여 일의 성과도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구성원의 만족감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White & Lippitt, 1968). 따라서 부패를 발생시키는 구조의 일부인 이중성이 자라게 될 가능성도 권위주의 사회에서 더 높다. 한국에서 아이들은 물론이려니와 어른들마저 이와 유사한 이중적 행동(예컨대, 교통경찰이 보일 때에만 과속을 하지 않는 행동)을 보일 때, 어린 시절부터의 비권위주의적인 교육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남성성(masculinity) - 여성성(femininity) 차원**은 자기주장성(assertiveness) 차원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힘과 성취를 중요시하면 남성적인 국가로, 화합과 삶의 질을 중요시하면 여성적인 국가로 분류된다.<sup>1)</sup> 남성적 국가에서는 자기주장을, 여성적 국가에서는 겸손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갈등 상황이 생기면 남성적 국가는 힘으로 대결하려고 하고 여성적 국가는 타협을 하려고 하며, 남성적 국가는 국민총생산(Gross National Product, GNP) 중에서 군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적 국가는 해외원조에 사

용하는 비율이 높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이탈리아, 및 독일이 모두 남성적 국가였고, 포클랜드 섬을 사이에 두고 전쟁을 일으켰던 영국과 아르헨티나도 모두 남성적 국가였다. 반면에 올랜드 섬을 사이에 놓고 갈등을 벌이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모두 여성적 국가로서 평화적 해결에 이르렀다. 미국과 아랍이 모두 남성적 문화권이라는 사실도 테러와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문화차원 상에서는 서로 상당히 유사하지만 유독 이 남성성-여성성 차원에서는 정반대로서, 한국은 여성적이고 일본은 남성적이다. 국가 간 협상 장면에서 여성적 국가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여성적 국가는 한번 양보를 하면서 “다음에는 저쪽에서도 양보를 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남성적 국가인 경우 “저들이 역시 우리의 힘에 굴복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여 다음에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힘을 과시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이다(나은영, 1995).

**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차원**은 낯선 것을 얼마나 위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나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을 호기심있게 바라보면 불확실성 수용 성향이 높은 것이며, 나와 다르면 무조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경계한다면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것이다.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높은 나라에서는 지킬 수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일단 많은 규칙들이 있어야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을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속성도 있어서 직업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반면에 불확실성 수용 성향이 높은 나라에서는 형식적인 서류나 규칙, 또는 딱딱하게 구조화된 상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직업스트레스도 적다.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큰 문화에서는 낯선 것이나 잘 모르는 사람을 꺼려하고 믿지 못하며, 따라서 끼리끼리 “인정”에 따라 아는 사람끼리 서로 눈감아 주는 연줄망이 작동하기가 쉽다. 객관적인 기준보다 사적으로 “나와 관계가 있는, 즉 나에게 낯설지 않은” 사람인지의 여부에 따라 공적 영역의 판단이나 결정에까지 영향을 주는 정실주의는 부패에 그만

1) 남성성-여성성 차원의 명칭은 Hofstede(1991) 자신도 고민 끝에 붙인 이름이다(차재호·나은영 역, 1995, p. 122 참조). 최종적으로 그가 이렇게 명명한 이유는 유일하게 이 차원에서만 남녀차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적 국가는 남녀 모두 부드러운 가치를 추구하고 삶의 질과 겸손을 중요시하며 남녀 모두 울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적 국가는 남녀차가 커서 남성은 힘과 성취를 중요시하고 울어서는 안되며 여성은 화합과 겸손을 중요시하고 우는 것은 괜찮지만 싸워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남성적 국가의 여성이 여성적 국가의 남성보다 오히려 더 힘과 성취를 중요시하는 남성적 가치를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것은 남녀차보다 국가문화의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차재호·나은영 역, 1995, p. 130 참조).

큼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Hofstede (1991)는 세계 50개국과 3개 지역(아랍, 동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지역)의 다국적 기업 IBM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차원 상에서 세계 각 나라들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를 밝혔다. 그의 조사에서 모든 나라의 IBM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을 오히려 그는 “국가문화의 차이”를 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IBM이라는 공통 분모는 모든 나라들에 똑같이 때문에 상수(constant)로 작용하여, 각 나라마다 다른 직업의 사람들을 표집해서 나오는 차이에 비해 그 차이의 원인을 오로지 국가문화의 차이로만 귀인시키기가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IBM직원들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공통적으로” 실제보다 더 개인주의 쪽에 가까운 결과가 나올 수는 있으나, 국가문화의 “차이”에 대한 결론은 훨씬 더 정확하게 내릴 수 있다.<sup>2</sup> 한국은 대체로 집단주의, 큰 권력거리(권위주의), 여성성, 그리고 불확실성 회피 성향을 지니고 있는 나라로 밝혀졌다. 따라서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시 하고,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불평등이 비교적 심하며, 자기주장보다는 겸손을 중요시하고, 낯선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류되는데,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이 문화차원들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부패나 국가투명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체로 모든 문화가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문화는 변화한다 해도 아주 서서히 변화한다. 특히 피상적인 수준의 문화보다 심층적인 수준의 문화는 더욱 그렇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세계의 문화가 “함께” 변화하는 한, 국가 간의 문화 “차이”

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다(차재호·나은영 역, 1995, p. 120 참조).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20여 년 전이었지만 수집하기 어려웠던 세계 수십 개국의 문화 차이 자료를 일관성있게 수집하여 요인분석한 Hofstede(1991)의 문화차원이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년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세를 보면 (Na & Cha, 2000), 대체로 고학력, 신세대, 및 대도시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여 급격히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의 개인주의는 개체 하나하나가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서양의 개인주의와 달리, 관계 속에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집단주의적 유교 문화와 교묘하게 접목되어 “자신에게 의미있는 최소집단” -- 즉, 핵가족, 중요한 또래집단, 또는 단짝친구 기리문화의 테두리 -- 단위의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있다. 또한 눈에 띄게 탈권위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신세대와 기존 권위주의 문화를 고수하고 있는 구세대 간의 이질화 현상도 두드러져(Na & Cha, 2000; Na & Duckitt, in press), 세대 간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커지고 있는 데 비해 남녀 간의 가치관 차이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도 생각과 행동 간의 괴리,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범”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 간의 이증성은 여전히 안고 있고, 변화의 대세에 걸로 드러내놓고 저항하지는 못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복고적 패권주의의 씨앗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태에서의 평등을 향한 변화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의사소통도 여전히 불투명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Hofstede(1991)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IBM 근무자들은 국적 이외의 모든 면에서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국가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좋은 정보원이 된다. 이처럼 동질적인 다국적 모집단 안에서 국가 집단 간에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은 오직 국적 그 자체, 즉 근무자들이 IBM에서 일하기 전에 성장했던 국가의 환경 뿐이다” (차재호·나은영 역, 1995, p. 356 참조).

## 대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대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는 흔히 2차 집단 형성의 선행요건으로 간주되며(Almond & Berba, 1963), 2차 집단의 형성은 또한 민주주의에서의 효과적인 정치적 참여에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된다(Inglehart,

1990). 즉, 대인 간 신뢰가 있어야만 가족 바깥의 타인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2차 집단이 형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적 정치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Banfield (1958)는 일찍이 남부 이탈리아 사회의 특성 중 하나로서 “무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핵가족 이외의 어떤 사람에게도 신뢰감이나 도덕적 의무감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Inglehart, 1990, p. 23에서 간접인용), Fukuyama (1995)의 “저신뢰 사회”와 유사하다. 다른 사람을 믿으려면 어느 정도의 모험(risk)이 필요하며, 상대의 배신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나은영, 1999). 그러므로 정보 공개의 양은 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꺼릴 것이고, 이는 불투명한 거래를 뜻하는 것이다. 즉, 정보 공개의 양은 “많이 믿는 사람일수록” 많고, 내 집단의 친한 사람, 깊은 사적 관계일수록 더욱 많아지며 공개하는 정보의 질도 더 높다. 내집단과 외집단 간의 차별이 심한 나라일수록 정보 공개의 양과 질, 즉 투명성에서 특히 비공식적인 사적 관계의 깊이 따라 현격한 차이가 나게 되고 (Na & Min, 2000), 중요한 정보를 지닌 권력기관과 사적인 관계나 연결망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욱 공적으로 공개되는 정보를 불신하게 된다.

문화차원에 관한 연구와는 독립적으로, 사회학자인 Inglehart(1997)는 43개 산업국가들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 그의 원래 관심은 물질주의 사회에서 탈물질주의 사회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 경제성장만으로 참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정치·사회적인 문화의 성숙된 변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탈물질주의적 변화 방향에서 출생연도에 따른 차이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크다. 즉, 대체로 선진국은 신·구세대 모두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후진국은 신·구세대 모두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크지 않은 데 비해, 한국의 경우

구세대는 여전히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신세대는 급격히 탈물질주의화된 가치관을 지니고 있어 그 격차가 세계 제1위라는 것이다.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 여건 간 인과적 측면에서 Inglehart(1997)와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진 Fukuyama (1995)는 사회 전반의 신뢰(trust) 수준이 일종의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신뢰 수준이 높아야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한 나라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의 종류가 그 사회 전체의 신뢰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잘 믿지 않는 저신뢰 사회이고 일본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을 잘 믿는 고신뢰 사회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똑똑하지 않은 자기 아들보다는 똑똑한 제3자에게 조직을 맡기는 데 비해, 한국은 똑똑한 남을 믿느니 차라리 똑똑하지 않더라도 자기 핏줄인 자식에게 기업을 맡긴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투명하게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인 간 신뢰는 의사소통 및 거래의 투명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glehart(1997)가 조사한 많은 문항들 가운데 “대인 간 신뢰”를 측정할 다국적 결과를 국가투명성 및 문화 간의 관계와 함께 살펴 보고자 하였다.

Inglehart(1997)가 1990년의 세계 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서 43개국(각 나라마다 약 1000명 정도 씩 표집; Inglehart, 1997, pp. 343-346 참조)의 대인 간 신뢰를 측정했던 문항은 “대체로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대할 때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내용이었다.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1점),”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2점),” 그리고 “잘 모르겠다(9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대인 간 신뢰 점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만하다고 말한 응답자들의 백분율”이었다 (Inglehart, 1997, p. 359).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은 투명한 정보 교환이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부패 없는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 앞서 서로를 믿는 신뢰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뢰는 다회에 걸친 좋은 결과들이 누적되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므로 구축하기는 어렵지만, 한 순간의 나쁜 결과만으로도 불신은 쉽게 생기기 때문에 신뢰와 불신은 비대칭성을 지니고 있다(나은영, 1999). 그러므로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거래를 위한 신뢰 구축에는 당연히 장기간에 걸친 많은 노력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 부패지수(CPI)와 국가투명성(National Transparency)

“부패(corruption)”와 “투명성(transparency)”의 개념적 정의는 본고의 서두에서 제시한 바와 같으며,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투명성 협회가 1995년부터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줄여서 “부패지수”라고 함--를 나라별로 산출하는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 CPI는 “세계 많은 나라들의 부패 정도에 관해 전문가와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조사한 많은 개별적인 조사자료에 바탕을 둔, 여러 여론조사들을 종합한 여론조사(a poll of polls)”이다(Transparency International, 1998).<sup>3</sup> 2001년에도 7개의 독립적인 기구들이 조사한 14개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CPI를 산정하였다. 이 여론조사들에는

3) 구체적으로 TI가 1998년에 CPI 산출을 위해 포함시켰던 여론조사 자료원들은 다음과 같다:

- 1)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isk Service and Country Forecasts),
- 2) Gallup International (50th Anniversary Survey),
- 3)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 4)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Asian Intelligence Issue),
- 5) Political Risk Services (International Country Risk Guide),
- 6)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 Private Sector Survey),
- 7) World Economic Forum & Harvar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Global Competitiveness Survey).

CPI에는 대체로 정치적·경제적 기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인·학계·분석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최소한 3개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가 없는 나라들은 CPI 산정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므로 TI의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이 실제로 더 심한 부패를 보일 수도 있고, 여론조사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적은 순위의 차이는 과장되고 포장되지 않아야 한다”고 국제투명성협회의 Eigen 회장은 말한다 (<http://www.transparency.or.kr> 참조).

초기에는 40-50개국에 한정된 조사였지만(1995년 41개국, 1996년 54개국, 1997년 52개국), 1998년부터 조사 대상국의 수를 현격히 증가시켜(1998년 85개국, 2000년 90개국, 2001년 91개국), 현재 CPI는 경제적, 정치적 변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측면에 활용되고 있다 (e.g., Goldsmith, 1999; Ikenberry, 2001; Pope & Vogl, 2000; Schulzinger, 2001; Wang & Rosenau, 2001).

정치학, 경제학, 및 사회학 분야에서 CPI를 활용하고 있는 정도에 비하여, 심리학과 커뮤니케이션학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CPI가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투명성이 한 국가 안에서, 혹은 여러 국가들 간에 전달되고 수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명확성, 그리고 그에 기반한 투명한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학문의 개별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다국적 조사 결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크게 나누어 보면 본 연구의 초점이 되는 연구문제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연구문제 1.** 부패지수(국가투명성)와 4개의 문화차원(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거리, 남성성-여성성, 및 불확실성 회피) 간 관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상대적 위치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 2.** 부패지수(국가투명성)와 대인 간 신뢰의 관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며,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상대적 위치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 3.** 부패지수(국가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차원들의 효과 중 어떤 부분이 특히 대인 간 신뢰 변인에 의해 매개될 것인가?

### 연구 방법

기본적으로 국가를 단위로 한 세 전공분야 조사 결과들의 통합적 2차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한 자료(부록A 참조)는 정치경제학, 사회학, 및 비교문화심리학 분야에서 각기 따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하나의 분석 틀 속에 종합한 것이다. 분석의 단위는 “개인”이 아닌 “국가”였다. 먼저, 문화적 변인들이 국가투명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1) 국제 투명성 협회에서 1998년에 내 놓은 세계 85개국의 부패지각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준거변인(criterion variable)으로 하고, (2) Hofstede (1991)가 세계 53개국을 대상으로 1972년에 조사한 문화차원별 지수(개인주의-집단주의 지수, 권력거리 지수, 남성성-여성성 지수, 및 불확실성 회피 지수)를 예언변인(predictor variable)으로 하여 이를 근거로 준거변인을 예언할 때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보조적으로 국가투명성과 문화차원들 간의 상관계수도 제시하였다. 이 분석에서 공통된 사례수는 48개국이었다.

그 다음에, 국가투명성이 대인 간 신뢰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1) 1998년의 CPI 자료를 준거변인으로 하고 (2) Inglehart(1997)가 1990년에 조사한 세계 43개국의 대인 간 신뢰(interpersonal trust) 자료를 예언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변인들 간 상관계수도 구하였다. 이 때의 공통된 사례수는 39개국이었다. 이에 더하여 문화차원이 대인 간 신뢰를 예언하는 정도에 관한 회귀분석도 실시하였으나, 이 경우 공통된 사례수가 26개국밖에 되지 않아 크게 신뢰할 만한 수준은 못되었다. 끝으로, 문화차원, 대인 간 신뢰, 및 국가투명성 간에 모두 공통되는 조사국가들의 수가 비록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대인 간 신뢰 변인이 문화차원과 국

가투명성 간의 관계 사이를 어느 정도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변인의 효과까지 분석해 보았다.

인과관계의 논리적 가정(문화차원 → 대인 간 신뢰 → 국가 투명성)과 일치하도록 연도별 으뜸차순 자료를 택하되, 조사 시기가 최대한 근접하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나라의 자료를 포함시키기 위해 국가투명성 자료는 1998년의 것을 택했다 (CPI 피조사국의 수는 1997년 52개국에서 1998년 85개국으로 1998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그 뒤로는 2000년에도 90개국으로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1998년 세계 85개국의 CPI는 부록A 표4의 왼쪽 열에 나와 있고, 이를 표준편차와 함께 그림으로 그린 것이 역시 부록B의 그림7에 나와 있다. 그림 7의 (a)는 CPI 평가시 표준편차가 작은 나라들이고, 그림7의 (b)는 표준편차가 큰 나라들이다. 즉, 투명성을 평가할 때 여러 여론조사마다 평가 여부가 들쭉날쭉할수록 큰 표준편차를 갖게 되어 그림 7의 (a)보다는 (b)에 위치하게 되며, 한국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그림7에서 흰색 부분에 놓일수록 투명성이 큰 나라임을 의미하며, 회색 부분으로 갈수록 불투명성이 큰 나라임을 의미한다.

### 연구 결과

#### 국가투명성과 4개의 문화차원 간 관계

먼저 국가투명성과 4개의 문화차원 간 상관계수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국가투명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문화차원은 개인주의 차원이었고( $r = 0.7089, p < .001$ ), 그 다음으로 권력거리 차원( $r = -0.6940, p < .001$ )과 불확실성 회피 차원( $r = -0.4449, p < .01$ )이 뒤를 이었다. 문화차원들 끼리는 권력거리와 개인주의가 강한 부적 상관관계( $r = -0.6656, p < .001$ )를 보였으며, 개인주의와 불확실성 회피 차원은 약한 부적 상관관계( $r = -0.3372, p < .05$ )를 보였다.

4개의 문화차원에 근거하여 국가투명성을 예언할 때 어느 정도의 변량이 설명되는지를 알아 보기 위

표 1. 국가투명성과 4개 문화차원 간의 상관계수(N = 48).

	국가투명성	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실성회피
투명성	1.0000				
권력거리	-0.6940***	1.0000			
개인주의	0.7089***	-0.6656***	1.0000		
남성성	-0.2099	0.0724	0.0640	1.0000	
불확실성회피	-0.4449**	0.2250	-0.3372*	-0.0294	1.000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2. 4개의 문화차원에 근거하여 국가투명성과 대인간 신뢰를 예언할 때의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와 설명변량( $R^2$ )

문화차원	국가 투명성 (48개국 자료)	대인간 신뢰 (26개국 자료)
개인주의	0.4085***	0.2518
권력거리	-0.3538***	-0.3278*
불확실성회피	-0.2339**	-0.2622
남성성	-0.2173**	-0.2593*
수정된 $R^2$	0.6555	0.5684

\* $p < .08$ , \*\* $p < .05$ , \*\*\* $p < .01$ .

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R^2$ 은 0.6848, 그리고 *Adjusted R<sup>2</sup>*은 0.6555로서, 국가투명성의 약 66%가 4개의 문화차원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개의 문화차원들이 모두 국가투명성을 예언하는 데 유의했으며, 특히 개인주의 차원이 국가 투명성의 가장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eta = 0.4085, p < .001$ ). 뒤이어 권력거리도 상당히 큰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beta = -0.3538, p < .001$ ). 한 국가가 더 개인주의적일수록,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불확실성 수용 경향이 클수록, 그리고 더 여성적일수록 투명성이 높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표 2 참조).

동일한 문화차원들에 근거하여 대인간 신뢰를 예언할 때의 결과는 비록 공통된 사례수가 적어 크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으나, 대인간 신뢰 변량의 약 57%가 4개 문화 차원으로 설명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대인간 신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문화차원은 권력거리 차원이었고( $\beta = -0.3278, p < .08$ ), 남성성(자기주장성) 차원도 대인간 신뢰를 비교적 잘 설명하였다( $\beta = -0.2593, p < .08$ ).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그리고 더 여성적인 문화일수록 대인간 신뢰가 더 높게

나타났다.

4개 문화차원 중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는 개인주의가 국가투명성과 관계를 지니는 정도를 시각화하여 그린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이 잘 보여 주듯이, 개인주의 국가일수록 투명성이 높고, 집단주의 국가일수록 투명성이 낮다. 48개국 중에서 한국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나라들은 검은색 점으로 표

시하였다(그림 1, 그림 2, 및 그림 3을 부록A와 대조해 보면 흰색 점들이 어떤 나라들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가난한 나라들이 좌측 하단에 모여 있고 부유한 나라들이 우측 상단에 모여 있는 양상이다. 일본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양분하는 중간 지점에 놓이고, 한국은 가난한 나라들의 중간 부분에 위치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런데 이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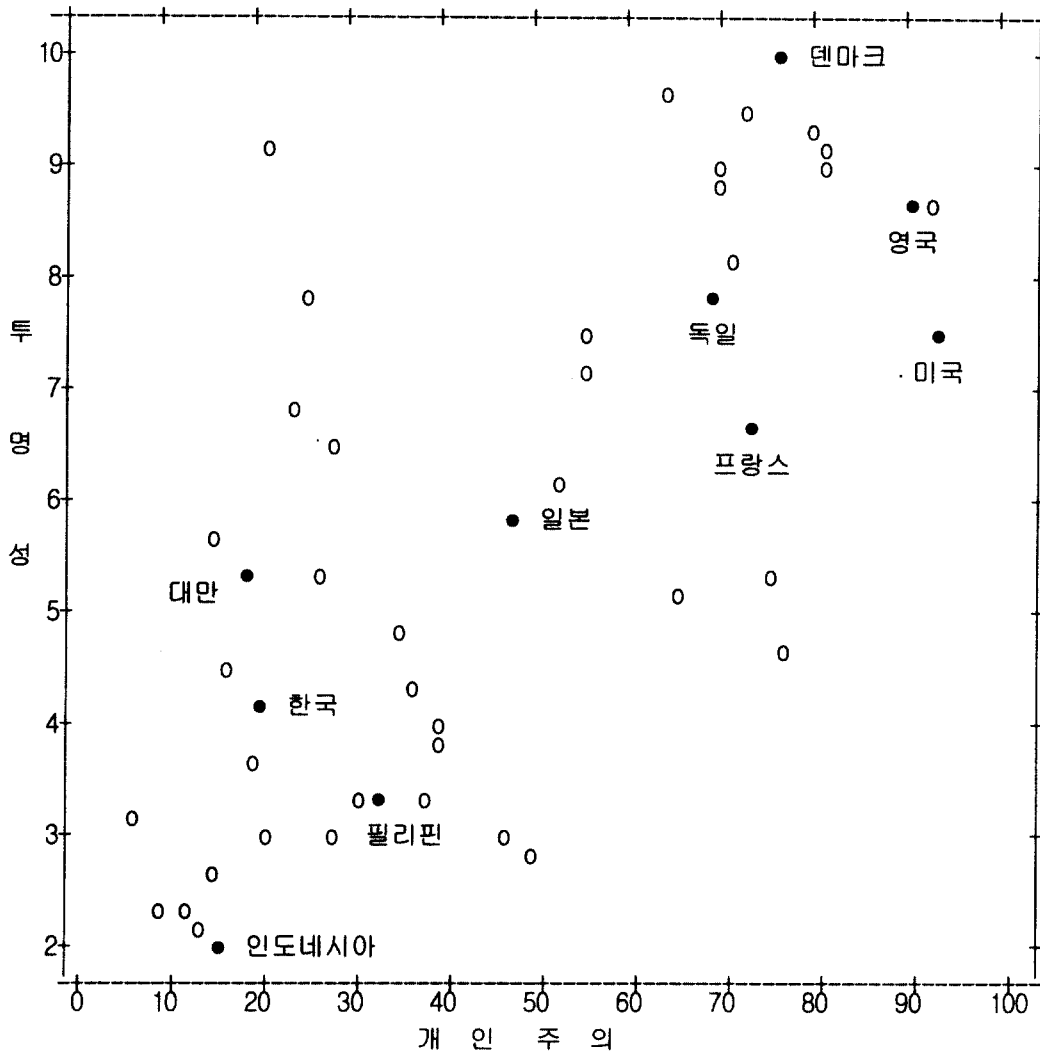


그림 1. 개인주의와 국가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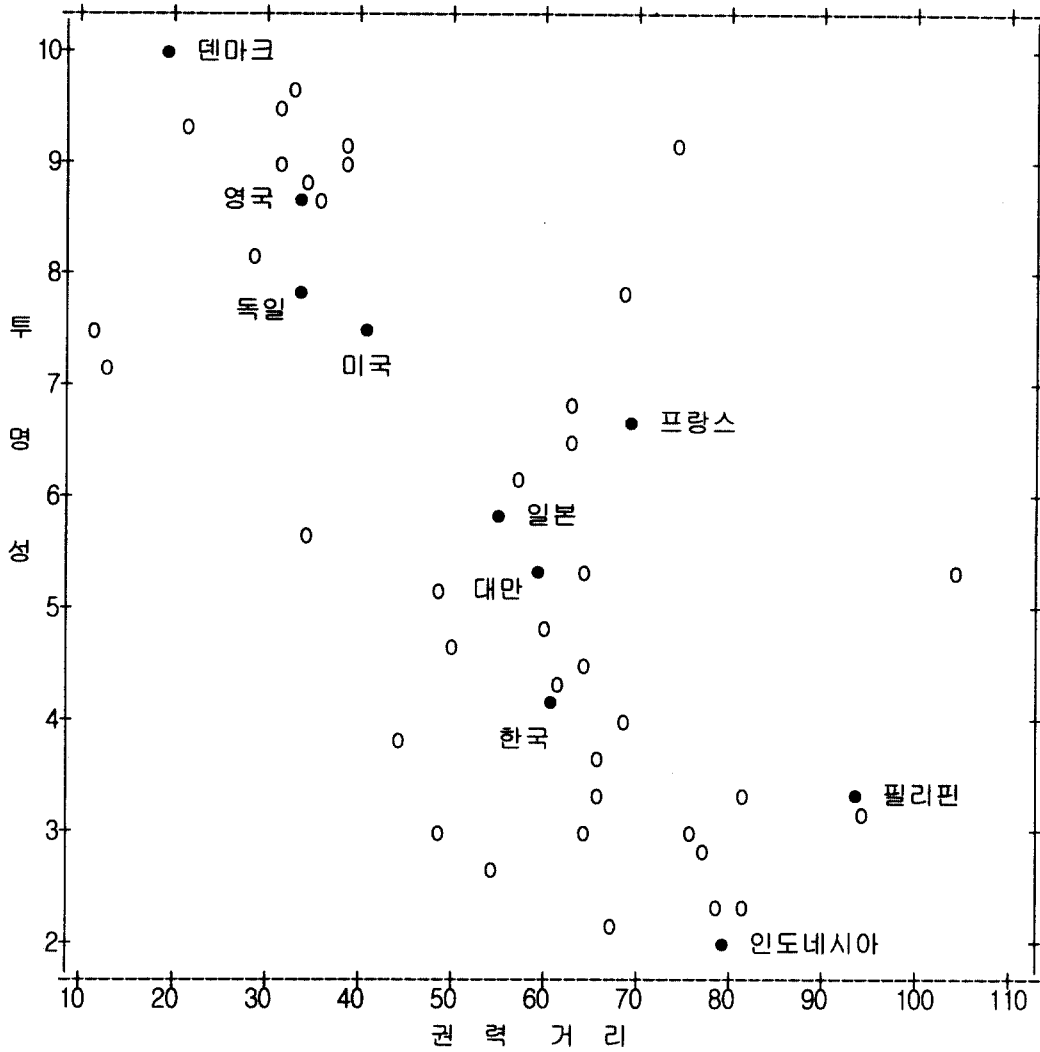


그림 2. 권력거리와 국가투명성

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만약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을 따로 따로 분석한다면 개인주의와 국가투명성 간에 거의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개인주의 지수가 한 나라의 GNP와도 상관관계가 높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Hofstede, 1991), 국가투명성의 문제를 국가의 경제적 부(富)의 수준과도 관련지

어 논의할 수 있다. Hofstede(1991)의 분석에 의하면 국가의 부의 수준은 개인주의의 결과라기보다는 원인이 된다. 즉, 부유해질수록 모든 자원への 접근이 개인 단위로 가능해져 점차 개인주의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충분한 자원에 개인 단위로 접근이 가능해지면, 집단의 비호를 받는 “집단 속 개인”으로서 불투명성을 지닌 모습이 아닌, 개개인의 있는 그대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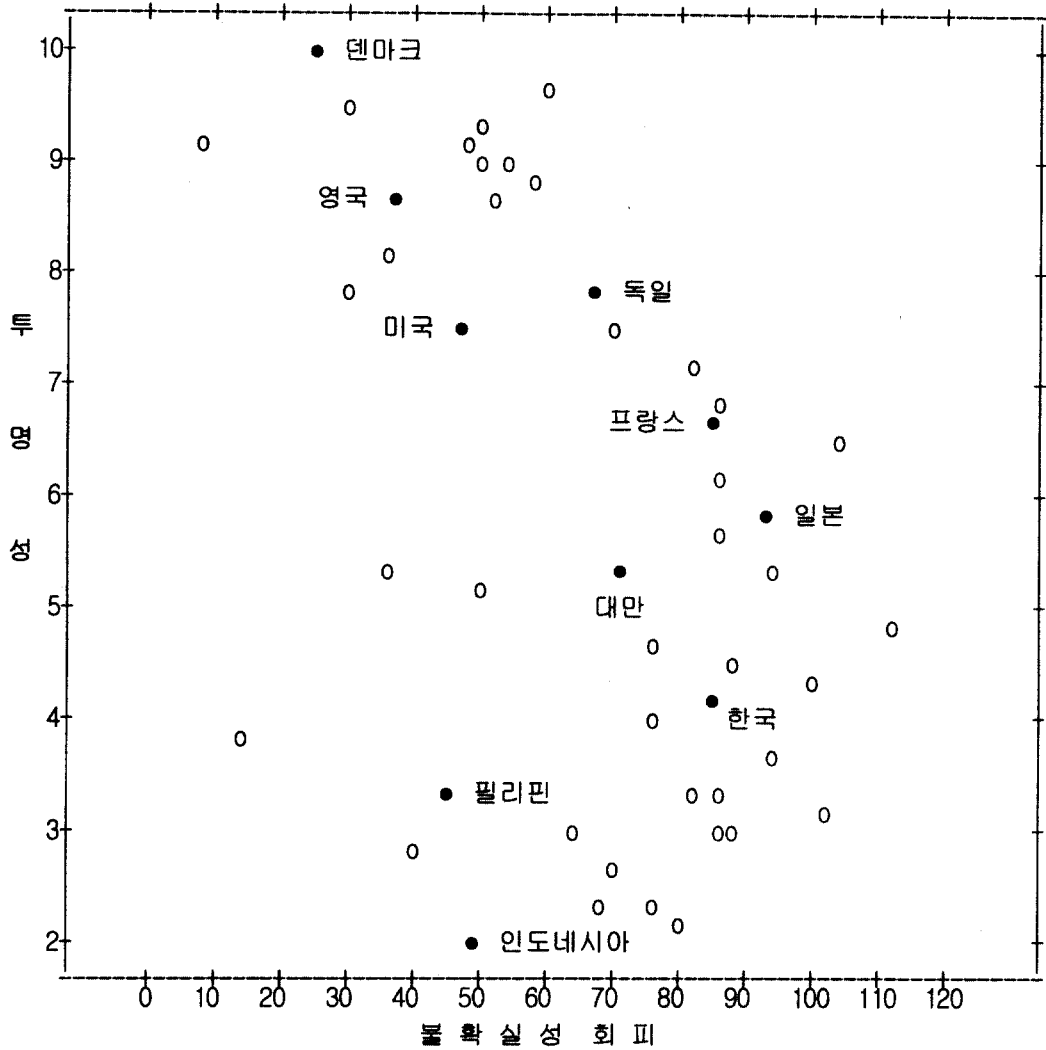


그림 3. 불확실성 회피 성향과 국가투명성

투명한 모습으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국가의 부의 수준이 개인주의와 국가투명성을 함께 일으킴으로써 개인주의와 국가투명성 간의 외현적 상관관계(spurious correlation)를 가져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투명성을 예측함에 있어서 두 번째로 강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권력거리 차원과의 관계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권력거리가 큰 나라일수록(즉, 권위주의가 큰 나라일수록) 국가투명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더구나 권력거리 차원은 앞서 살펴 본 개인주의 차원과 달리, 부유한 나라들과 가난한 나라들을 분리해서 보아도 국가투명성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유지됨을 알 수 있다(그림2 참조). 또한 이 권력거리 차원은 국가투명

성 뿐만 아니라 대인 간 신뢰도 공히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표 2 참조), 권위주의적 문화성향이 대인 간 신뢰와 국가투명성 모두를 국가의 부의 수준과 무관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투명성과 권위주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권위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큰 힘을 지니는 사람이나 권력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및 정책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 주지 않아도 이를 문제시하는 사람들이 적다. 앞서 언급했듯이, 권력거리가 크다는 것은 권력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권력 불평등을 어느 정도 당연시하는 경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권위주의가 약해질수록 권력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형평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 누구나 평등하게 양질의 정보에 동일한 양만큼 노출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그림 3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과 국가투명성 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 관계의 크기가 약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불확실성 회피 성향(나와 다른 것 또는 낯선 것을 호기심 있게 보기보다 위협하게 보는 성향)이 큰 나라일수록 국가투명성이 떨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부유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경향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클수록 국가투명성이 떨어지지만, 가난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불확실성 회피 차원은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한 복합적인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예컨대, “확실성” 또는 “성급함”을 추구하는 측면과 “낯선 것” 또는 “변화”를 회피하는 측면은 엄연히 구분될 수 있다 (Na & Duckitt, in press). 확실성의 추구는 투명성

과 정비례하고, 낯선 것의 회피는 투명성과 반비례할 가능성이 높다.

### 대인간 신뢰와 국가투명성 간 관계

그렇다면, 대인 간 신뢰에 근거하여 국가투명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얼마나 될까? 표 3의 결과는 대인 간 신뢰, 국가투명성, 및 4개 문화차원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대인 간 신뢰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부터 열거하면 국가투명성( $r = 0.6806, p < .001$ ), 불확실성 회피( $r = -0.6783, p < .001$ ), 권력거리( $r = -0.6623, p < .001$ ), 그리고 개인주의( $r = 0.6065, p < .01$ )의 순이다.

대인 간 신뢰에 근거하여 국가투명성을 예언할 때의 설명변량을 알아 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Adjusted R*<sup>2</sup>은 0.4487로서 국가투명성 변량의 약 44.9%가 대인 간 신뢰로 설명이 되었다 (표준화된 회귀계수  $\beta = 0.6806, t = 5.651, p < .001$ ). 이 결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4이다. 이 그림이 보여 주듯이, 대인 간 신뢰가 큰 나라일수록 투명성이 높다.

그림 4에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프랑스의 경우 대인간 신뢰는 비교적 낮지만 국가투명성은 높다는 사실이다. 프랑스는 문화차원상에서 큰 권력거리와 개인주의를 함께 지니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감안하면(Hofstede, 1991), 프랑스의 큰 권력거리는 대인 간 신뢰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프랑스의 개인주의는 국가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즉, 앞에서 살펴 본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투명성은 개인주의 차원으로 더 잘 설명되고 대인

표 3. 대인 간 신뢰, 국가투명성, 및 4개 문화차원 간의 상관계수

	대인간 신뢰	국가투명성	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대인간 신뢰	1.0000	0.6806***	-0.6623***	0.6065**	-0.3461	-0.6783***
( <i>p</i> )	0.0000	0.0001	0.0002	0.0010	0.0833	0.0001
( <i>n</i> )	39	39	26	26	2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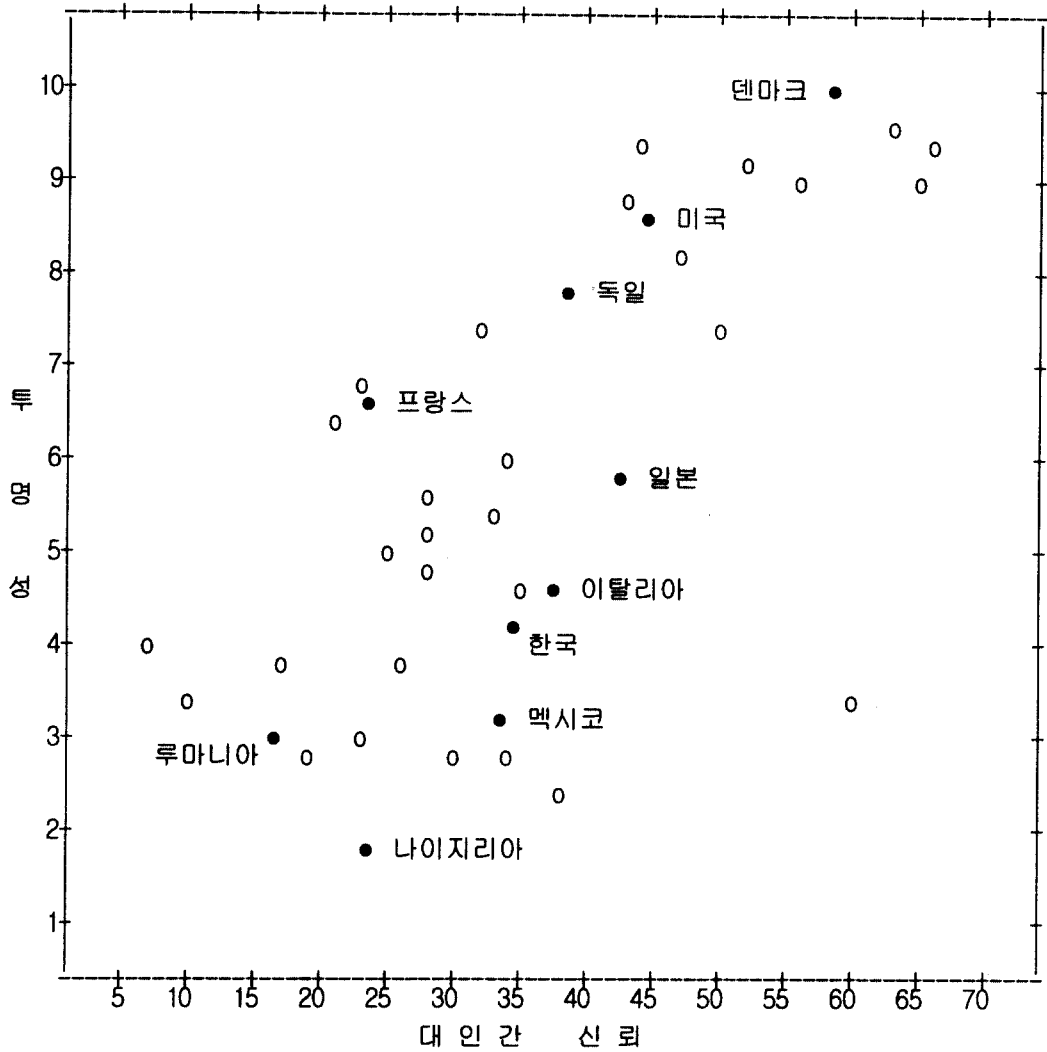


그림 4. 대인 간 신뢰와 국가투명성

간 신뢰는 권력거리로 더 잘 설명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문화차원과 대인 간 신뢰 간 관계

부수적으로, 문화차원과 대인간 신뢰 간 관계를 살펴 보면(표 3 참조),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대인간

신뢰와 가장 크게 의미있는 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낮은 것 또는 자기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 간 신뢰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낮은 상황을 두려워할수록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권력거리가 개인주의보다 대인 간 신뢰와 더 강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개인주의와 권력거리는 상관

관계가 높기 때문에 설명변량 중 상당부분이 중복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가투명성은 개인주의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던 표 1의 결과를 상기하면, 권력거리가 대인 간 신뢰와 높은 관계를 지닌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즉,윗사람에게 이견(異見)을 이야기하기가 꺼리는 문화일수록 대인 간 신뢰가 낮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음 놓고 (예컨대, “괘씸죄”를 염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상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 얼마나 용이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상황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게 느껴지고 따라서 많은 부분이 사전에 차단된다면 그만큼 대인 간 신뢰는 낮아지고 투명성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문화차원과 국가투명성 간 관계에서 대인 간 신뢰가 지니는 매개 정도

네 개의 문화차원들이 국가투명성에 미치는 영향력 가운데 어느 정도가 대인 간 신뢰에 의해 매개될

것인가? 그림 5-1부터 그림 5-4까지는 각각의 문화차원들이 국가투명성에 미치는 영향력 중 어느 정도가 대인 간 신뢰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나타낸 그림들이다.

대인 간 신뢰 변인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결론에 도달하려면 각 문화차원이 국가투명성에 직접적으로 미쳤던 영향력의 크기가 대인 간 신뢰 변인의 도입으로 인하여 크게 감소해야 한다 (Baron & Kenny, 1986). 즉, 그림 5-1(개인주의의 효과)이나 그림5-3(불확실성 회피 성향의 효과)처럼, 각 문화차원이 국가투명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신뢰수준 변인의 도입 전에는 유의했으나 신뢰수준 통제 후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감소했을 때, 신뢰수준의 매개효과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확실한 매개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문화차원이 매개변인, 즉 대인 간 신뢰에 미치는 효과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세 변인에 모두 공통된 사례수가 적었기 때문에( $n = 26$ ),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절대치는 상당히 컸지만 유의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 경우가 많아, 전반적으로 확실한 매개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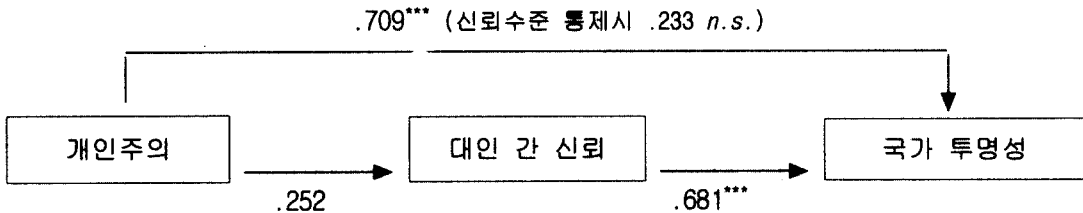


그림 5-1. 개인주의가 국가투명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대인 간 신뢰의 매개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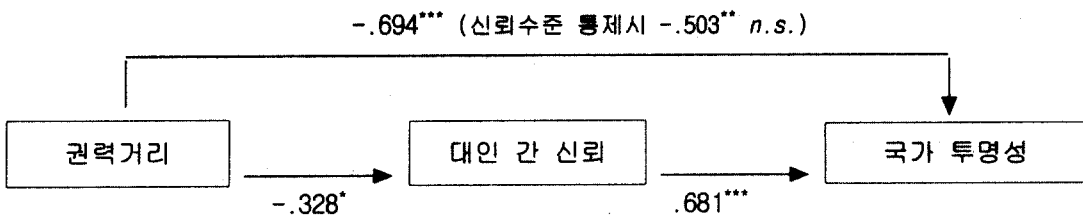


그림 5-2. 권력거리가 국가투명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대인 간 신뢰의 매개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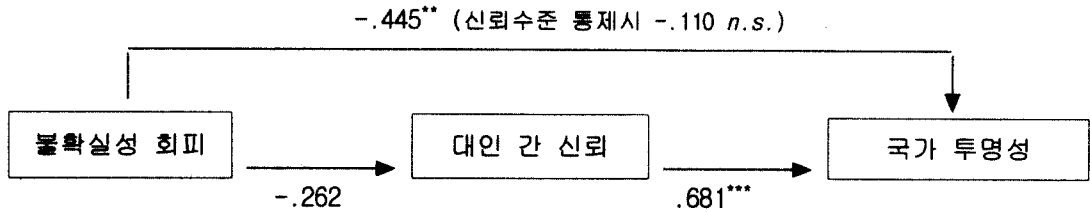


그림 5-3. 불확실성 회피가 국가투명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대인 간 신뢰의 매개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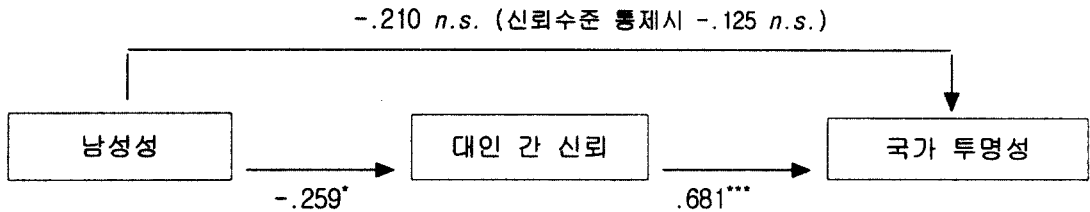


그림 5-4. 남성성이 국가투명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대인 간 신뢰의 매개역할

여기서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국가투명성에 미치는 개인주의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의 효과는 대인 간 신뢰에 의해 매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권력거리는 국가투명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가투명성에 유의한 영향력의 크기를 지니고 있던 개인주의와 불확실성 회피 차원의 경우 대인 간 신뢰 변인을 통제하면 그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림 5-1과 그림 5-3 참조). 그리고 권력거리 차원이 국가투명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는 신뢰 변인을 통제했을 때 그 효과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상당히 큰 효과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권력거리는 대인 간 신뢰를 거치지 않고 국가투명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컸다고 말할 수 있다. 남성성의 경우는 신뢰수준 통제 전과 후의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 종합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투명성 변량의 약 66%가 4개의 문화차원 (개인주의-집단주의, 권력거리, 남성성-여성성, 및 불확실성 회피)으로 설명이 되며, 그 중에서도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의 설명력이 가장 컸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한 나라의 부(富)의 수준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기 때문에, 부의 수준이 개인주의와 국가투명성을 함께 유발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2. 대인 간 신뢰 변량의 약 57%가 4개의 문화차원으로 설명이 되며, 그 중에서도 권력거리 차원의 설명력이 가장 컸다. 권력거리 차원은 대인 간 신뢰와 국가투명성을 공히 일관성있게 설명해 주는 문화차원으로 떠올랐다.
3. 국가투명성 변량의 약 45%가 대인 간 신뢰로 설명이 되었다.
4. 대체로 한 나라가 개인주의적일수록, 권력거리가 작을수록, 여성적일수록, 그리고 불확실성 수용 성향이 높을수록 더 큰 투명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개인주의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국가투명성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부분은 대인 간 신뢰에 의해 매개되었으며, 권력거리가 국가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에서는 대인 간 신뢰가 매개하는 부분이 작았다.

###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 사회에 던져 주는 시사점은 국가투명성에 관한 한 불리한 문화적 조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집단주의, 권위주의, 불확실성 회피 성향, 그리고 낮은 대인간 신뢰가 모두 투명성 결여를 야기하는 요인들이다. 다만, 비록 설명 변량이 크지는 않지만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보아 한국의 여성적 문화, 즉 자기주장보다 겸손을 중요시하고, 성취보다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고, 갈등이 있을 때 힘으로써 대결하려 하기보다 타협점을 찾으려 하는 여성적 성향이 국가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여성적 문화성향마저도 근래에는 살벌한 경쟁사회의 틀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점차 대결구도와 성취지향의 남성적 문화 쪽으로 변질되어 가는 경향을 보여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 연구의 의의와 문제점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진 국가 단위의 조사자료들을 하나의 틀로 종합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록 분석 방법은 간단했지만,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힘들게 수집한 다국적 자료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학제간 통합의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문제점은 모든 상관 및 회귀분석 연구들이 갖는 공통된 문제점으로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신뢰가 투명성을 가져오듯이 투명성이 신뢰를 가져올 수도 있다. 더구나 국가를 단위로 하는 분석에서는 국가별 통계치들 자체에 너무나 많은 다른 변인들이 개입되어 있어서, 변인들 간의 명확한 관계를 호려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국가들의 “경제적 수준”을 통제할 때 변인들 간의 관계가 많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빈곤”과 “부패” 간의

악순환의 고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국제투명성 협회가 내 놓고 있는 부패지수(CPI) 자체의 문제점과 관련된 논의도 빼 놓을 수 없다. 과연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관계 없이 동일하게 투명성을 추구해야만 하는가?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바탕을 둔 투명성의 결여를 쉽게 버릴 수 있는가? 또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가?

세계 나라들이 소수의 부유한 나라들과 다수의 가난한 나라들로 양분화되어 가는 경향이 너무나 뚜렷이 드러나, 마치 우월한 나라와 열등한 나라를 양분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을 일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난하고 투명하지 못한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놓은 듯하다. CPI에 의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서열화 문제는 한국 내에서의 대학 서열화로 인한 병폐와 유사한 현상을 세계 속에서 발견하게 해 준다. CPI 최하 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인을 범죄인 취급한다는 Jason(2001)의 항변도 이유가 있다. 약소국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투명할 경우, 단점까지 무작정 개방함으로써 입게 될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투명성의 추구는 경제적 부의 수준과 부패 간의 역관계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듦으로써 마치 가난이 죄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측면이 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국가이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일수록 부패의 상징인 뇌물 수수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Eigen, 1996 참조).

### 조직의 투명성과 국가투명성

국가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볼 때, 그 조직이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 모델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문화 차원 중에서 특히 두 차원이 중요하다. 그 하나는 해당 나라 또는 조직에서 힘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권력거리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그 조직에 규칙이 얼마나 많으며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갖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불확실성 회피 차원이다(Hofstede, 1991).

그림 6에 나타나 있듯이, 큰 권력거리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을 지니고 있는 조직모델은 피라미드 모델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이 그림에 적용해 보면, 피라미드 모델은 가장 불투명성이 높은 모델이다. 여기 속하는 나라들 중에 일본과 프랑스는 비교적 투명성이 높지만, 한국은 투명성이 낮다. 피라미드 조직모델 속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흐름도 피라미드를 따라 움직이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과 상향 커뮤니케이션이 억압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피라미드 조직에는 규칙도 많지만, 권력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규칙의 합리적 집행도 보장되지 못한다. 그 다음, 인도와 필리핀 등의 가족 모델은 규칙보다 권력자의 입김이 더 강한 조직모델이다. 투명성의 측면에서 피라미드 조직보다 조금은 나을지 모르지만 그다지 크게 낮다

고는 볼 수 없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을 규칙이 아닌 가부장적 권력자가 통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에 근접한 조직모델은 작은 권력거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시장 모델과 기계 모델이며, 세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이 두 모델 쪽(특히 시장 모델 쪽)이다. 독일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기계 모델은 권력자의 입김보다 규칙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규칙만 잘 정비되어 있으면 조직 내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집행이 가능하다. 끝으로 시장 모델은 권력자의 입김도 없지만 자유로운 활동을 얹어매고 있는 규제 또한 많지 않다. 그래도 모든 조직 내의 의사결정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부드럽게 잘 진행되어 간다.

국가의 문화적 특성과 조직모델이 어떠한가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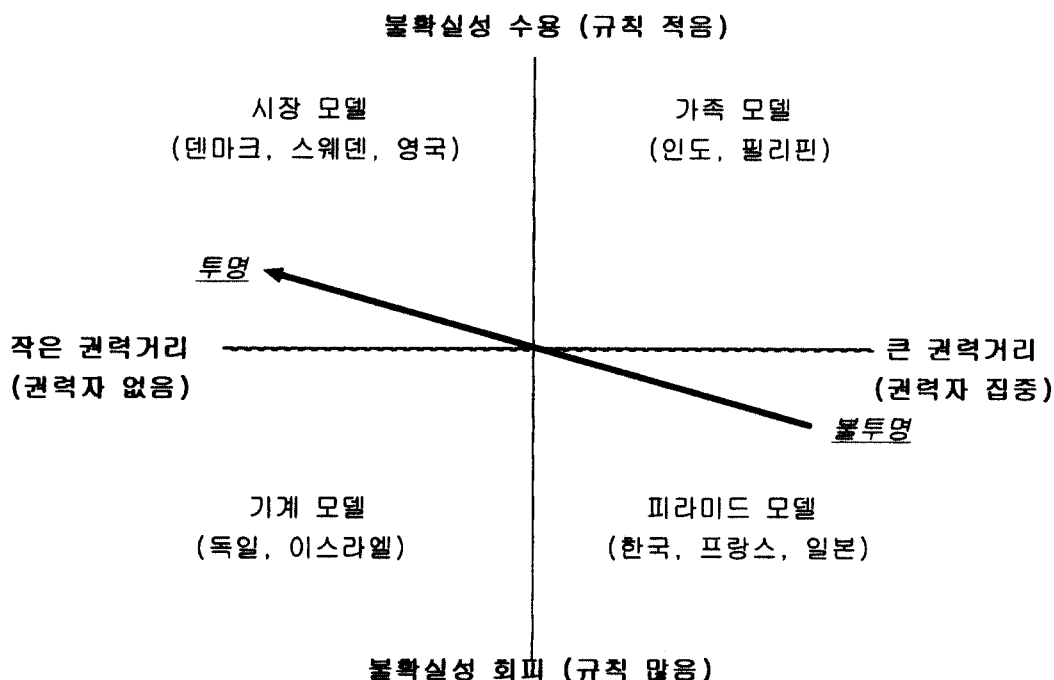


그림 6. 권력거리 차원과 불확실성 회피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조직 모델 (Hofstede, 1991): 왼쪽 위로 갈수록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 (시장 모델과 기계 모델).

라 커뮤니케이션의 흐름도 달라지고 투명성의 정도도 달라진다. 물론 한 나라에도 여러 유형의 조직모델들이 있을 수 있고, 한 조직에도 여러 유형의 개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한 나라에 지배적인 조직모델의 유형이 무엇인지, 한 조직에 지배적인 개인들의 유형이 어떠한지에 따라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흐름과 조직 전체의 투명성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과 국가투명성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란 앞서 언급한 대로 화자의 입장에서 속뜻을 남겨 놓지 않고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리고 청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속뜻을 “미루어 짐작”하지 않고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맥락(low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이다. 한 나라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습관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문화적 맥락 속에서 키워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오랜 세월 길들여져 온 커뮤니케이션 습관이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국민 내부에서도 투명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져 가고 있다.

모든 사회현상의 진행과정에 의사소통의 흐름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권력의 흐름, 계약관계 속의 경제적·사회적 자산 교환 등 모든 현상에 투명성을 전제로 한 열린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이다. 투명하지 않은 정보 교환이 있는 사회 속에서는 신뢰가 자랄 수 없고, 따라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이재혁, 1996). 투명성 쪽으로의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이제 우리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세계 나라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이다. 모든 개체가 동등한 양질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혹 보수적인 쪽으로의 복고주의 성향이 내비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뿐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

다는 역설도 가능하다.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 투명성 증가와 부패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안: 문화적 한계의 극복

뒷거래와 같은 부패가 없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대안들도 필요하다. 실제로 홍콩과 싱가포르의 부패를 극복한 좋은 사례로 떠오르고 있다. 그 정책의 이면을 들여다 보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메시지의 전달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모두 큰 권력거리와 집단주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부분을 지니고 있지만, 불확실성 회피 성향은 낮기 때문에 낮은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더 열려 있다. 여기서 홍콩(Chui, 2000)과 싱가포르(Yak, 2000)의 부패 극복 사례를 살펴 보는 것은 한국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투명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뿌리깊은 문화적 제한점들도 극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이려는 것이다. 물론 문화적 장점들까지 버리면서 투명성의 추구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래의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문화적 단점들이 있다면 새로운 세계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개선해 보려는 시도가 더 바람직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문화적 한계를 극복한 홍콩의 사례를 중심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홍콩의 영정공서 사회지역국 사무부총장인 Chui (2001)에 따르면, 1974년 영정공서(ICAC)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홍콩의 대중들에게 “부패는 생활의 일부”였으며 “필요악”으로 인식되었다. 그 당시 홍콩의 상황은 한국과 상당히 유사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방안들을 기초로 한 홍콩의 반부패 전략이 실효를 거두어, 1998년에는 85개국 중 국가투명성 15위, 2001년에는 91개국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1. 부패가 높은 위험을 갖는 범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강화된 활동들을 통해 강력한 억제책 구축.

2. 부패 기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조직의 제도를 변화.

3. 정의,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들을 보강하고 부패 동기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가치와 행동 패턴 변형.

- <http://www.transparency.or.kr/documents/oced-adb08.html>

구체적으로, 조사·예방·교육의 3박자를 갖춘 정책 실행을 위해 “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사하여 투옥시키는 수사국, 제도와 시스템의 부패 허점을 예방하기 위한 부패방지국, 부패에 대한 대중적 태도를 바꾸기 위한 사회지역국”을 가동시켰다. 앞의 두 가지는 기존의 관계지향적 문화에서 부패행동시 기대할 수 있었던 “낮은 모험, 높은 이득” 인식을 “높은 모험, 낮은 이득” 인식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부패 행동에 개입할 확률을 줄이려는 것이었다. 즉, 부패행동(예: 뇌물 수수, 권력 남용)을 저지르면 “처벌받게 될 위험성이 높고, 그다지 큰 이득은 기대되지 않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 번째 것은 일찍부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반부패 윤리 교육(업무 윤리의식, 청렴서약 메시지 등 포함)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깨끗한 사회를 기약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교육 메시지 프로그램 내에서 “가치를 설교”하는 대신 “윤리적 판단의 어려움이 닦혔을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갖추도록 교육 커리큘럼이 조직되어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명령이나 설교만으로는 일시적인 겉보기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화된 장기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cf. White & Lippitt, 1968).

오늘날 한국의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약하다고 하지만, 나라의 어른들이 존경받을 만큼 언행이 일치했는지, 권위로 포장된 허위의식은 없었는지 반성해 볼 필요도 있다. 비록 명분은 “집단”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개인의 이익” 추구에 급급해 보이는 어른들의 모습이 젊은 층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어른들에게 불만을 느끼면, 그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모방하여 배우게 되고, 따라서 부패마저도 뿌리깊은 문화적 속성으로서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회관

계가 그렇듯이 투명성과 반부패의 기반이 되는 대인 간 신뢰도 마찬가지로 “상호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상호 간의 믿음이 없이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회가 불가능하다.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호 간의 믿음을 위해서는 이중성이 없는 의사소통 습관의 생활화와 이를 위한 문화적 토양이 가꾸어져야 한다.

바야흐로 전세계적인 추세는 투명성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현 상태에서의 과제는 어떻게 부패를 없앴으로써 투명성을 증진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부패 감소 문제에 세계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개방 압력과 함께 밀려오는 투명성 압력을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투명한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기업 경영, 대인관계, 정치적 의사소통, 및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 과정 모두에서 투명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에만 의존하지 말고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예: 각 부처들 간의 협력)의 효율적 이용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직 안에서든 나라 안에서든, 상향·하향 커뮤니케이션 모두가 투명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21세기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국가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나은영 (1995). 문화 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본 국제협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1), 199-226.
- 나은영 (1999). 신뢰의 사회심리학적 기초. 한국사회학 평론, 5, 68-99.
- 박승관 (1994). 드러난 얼굴과 보이지 않는 손: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 서울: 전예원.
- 이재혁 (1996). 신뢰, 거래비용, 그리고 연결망. 한국사회학, 30, 519-543.
- 한규석 (2000). 한국인의 공과 사의 영역: 공정과 인정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2),

39-63.

- Almond, G., &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nfield, E. (1958).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Chicago: Free Press.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hui, C. (2000). 훌륭한 인간, 훌륭한 법: 공공분야 부패억제 (2. 홍콩의 사례). 새천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반부패 서울회의 발표논문 (2000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 Eigen, P. (1996). Combatting corruption around the world: Field reports. *Journal of Democracy*, 7(1), 158-168.
- Fukuyama, F. (1995). *Trust: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구승희 역 (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Fukuyama, F., & Marwah, S. (2000). Dimensions of development: Comparing East Asia and Latin America. *Journal of Democracy*, 11(4), 80-94.
- Goldsmith, A. A. (1999). Slapping the grasping hand: Correlates of political corruption in emerging markets. *The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58(4), 865-883.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s. [차재호 · 나은영 역 (1995). *세계의 문화와 조직: 문화간 협력과 세계 속에서의 생존*. 서울: 학지사.]
- Hors, I. (2000). Fighting corrup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he OECD Observer)*, 220, 43-45.
- Ikenberry, G. J. (2001). Power and conflict in the age of transparency. *Foreign Affairs*, 80(2), 169-178.
-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son, P. (2001). Is Nigeria the most corrupt country in the world? *New African*, 392(21), 21-24.
- Leung, K. (1987). Some determinants of reactions to procedural models for conflict resolution: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5), 898-908.
- Na, E. -Y. (1997). Cultural impediments to mind reformation processes: Face-saving and conformity.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4(1), 67-89.
- Na, E. -Y., & Cha, J. -H. (2000). Changes in values and the generation gap between 1970s and 1990s in Korea. *Korea Journal (UNESCO)*, 40(1), 285-324.
- Na, E. -Y., & Duckitt, J. (in press). Value consensus and diversity between generations and genders in Korea. *Social Indicators Research: Special Issue*.
- Na, E. -Y., & Min, K. -H. (2000). Discrepancies between formal/explicit and informal/implicit norms in Korea and generational gaps: Theoretical points and evidence from existing survey data. *Korean Social Science Journal*, 27(1), 111-140.
- Pope, J., & Vogl, F. (2000). Making anti-corruption agencies more effective. *Finance and Development*, 37(2), 6-9.
- Schulzinger, R. D. (2001). Transparency, secrecy, and citizenship. *Diplomatic History*, 25(2), 165-178.
- Transparency International (1998). The 1998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http://www.transparency.de/documents/cpi/index.html> and "Graphical Presentation" in <http://www.gwdg.de/~uuvvu/Graphics1998.html>.
-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00). The 2000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http://www.gwdg.de/~uuvvu/2000/Data.html](http://www.gwdg.de/~uuvvu/2000>Data.html).
- Wang, H., & Rosenau, J. N. (2001). Transparency

- International and corruption as an issue of global governance. *Global Governance*, 7(1), 25-49.
- White, R. K., & Lippitt, R. (1968). Leader behavior and member reaction in three "social climates." In D. Cartwright & A. Zander (Eds.), *Group dynamics: Research and theory* (3rd ed., pp. 318-335). New York: Harper & Row.
- Yak, C. C. (2000). *홀통한 인간, 홀통한 법: 공공분야 부패억제 (1. 싱가포르의 사례)*. 새천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반부패 서울회의 발표논문 (2000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http://www.transparency.or.kr/documents>

부 록 A

표 4. 분석에 사용된 61개국의 국가투명성, 대인간 신뢰, 및 4개의 문화차원별 점수  
(국제투명성협회, Inglehart, 및 Hofstede의 자료를 종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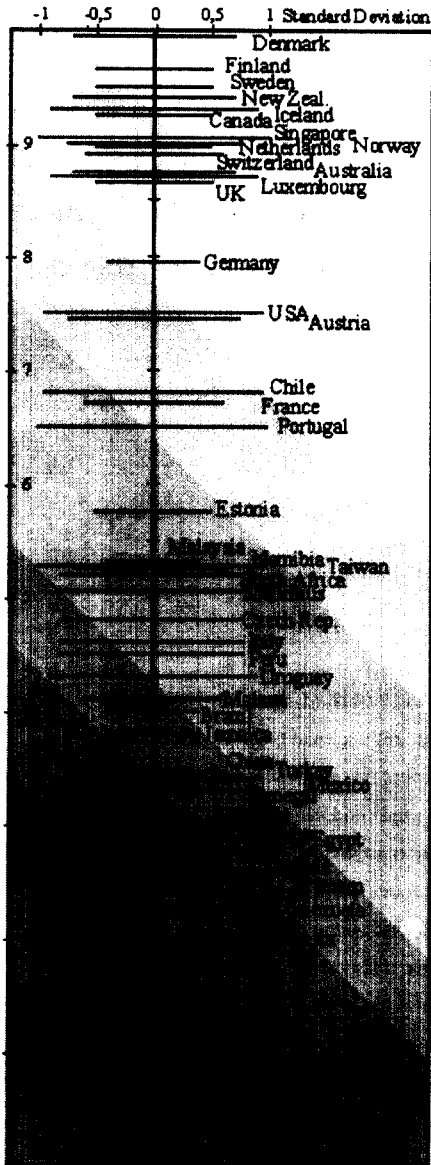
번호	국가명	투명성	신뢰	문 화 차 원				번호	국가명	투명성	신뢰	문 화 차 원			
				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실성회피					권력거리	개인주의	남성성	불확실성회피
1	덴마크	10.0	58	18	74	16	23	31	그리스	4.9	-	60	35	57	112
2	핀란드	9.6	63	33	63	26	59	32	체코	4.8	28	-	-	-	-
3	스웨덴	9.5	66	31	71	5	29	33	이탈리아	4.6	37	50	76	70	75
4	뉴질랜드	9.4	-	22	79	58	49	34	폴란드	4.6	35	-	-	-	-
5	아이슬랜드	9.3	44	-	-	-	-	35	페루	4.5	-	64	16	42	87
6	캐나다	9.2	52	39	80	52	48	36	우루과이	4.3	-	61	36	38	100
7	싱가포르	9.1	-	74	20	48	8	37	한국	4.2	34	60	18	39	85
8	네덜란드	9.0	56	38	80	14	53	38	브라질	4.0	7	69	38	49	76
9	노르웨이	9.0	65	31	69	8	50	39	벨라루스	3.9	26	-	-	-	-
10	스위스	8.9	43	34	68	70	58	40	슬로바키아	3.9	17	-	-	-	-
11	호주	8.7	-	36	90	61	51	41	자메이카	3.8	-	45	39	68	13
12	영국	8.7	44	35	89	66	35	42	엘살바도르	3.6	-	66	19	40	94
13	아일랜드	8.2	47	28	70	68	35	43	중국	3.5	60	-	-	-	-
14	독일	7.9	38	35	67	66	65	44	터키	3.4	10	66	37	45	85
15	홍콩	7.8	-	68	25	57	29	45	멕시코	3.3	33	81	30	69	82
16	오스트리아	7.5	32	11	55	79	70	46	필리핀	3.3	-	94	32	64	44
17	미국	7.5	50	40	91	62	46	47	과테말라	3.1	-	95	6	37	101
18	이스라엘	7.1	-	13	54	47	81	48	아르헨티나	3.0	23	49	46	56	86
19	칠레	6.8	23	63	23	28	86	49	루마니아	3.0	16	-	-	-	-
20	프랑스	6.7	23	68	71	43	86	50	태국	3.0	-	64	20	34	64
21	포르투갈	6.5	21	63	27	31	104	51	유고	3.0	-	76	27	21	88
22	스페인	6.1	34	57	51	42	86	52	불가리아	2.9	30	-	-	-	-
23	일본	5.8	42	54	46	95	92	53	인도	2.9	34	77	48	56	40
24	에스토니아	5.7	28	-	-	-	-	54	라트비아	2.7	19	-	-	-	-
25	코스타리카	5.6	-	35	15	21	86	55	파키스탄	2.7	-	55	14	50	70
26	벨기에	5.4	33	65	75	54	94	56	러시아	2.4	38	-	-	-	-
27	말레이시아	5.3	-	104	26	50	36	57	에콰도르	2.3	-	78	8	63	67
28	대만	5.3	-	58	17	45	69	58	베네수엘라	2.3	-	81	12	73	76
29	남아프리카	5.2	28	49	65	63	49	59	콜롬비아	2.2	-	67	13	64	80
30	헝가리	5.0	25	-	-	-	-	60	인도네시아	2.0	-	78	14	46	48
								61	나이지리아	1.9	23	-	-	-	-

주. 원자료의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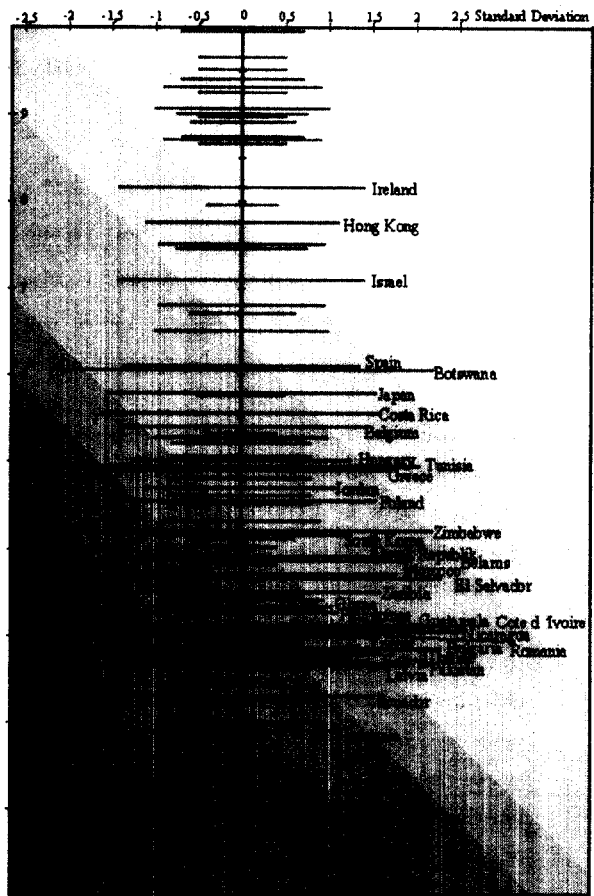
- (1) 국가투명성: 국제투명성협회 웹사이트(<http://www.transparency.de/documents/cpi/index.html>)에서 찾은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1998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85개국 자료.
- (2) 신뢰: Inglehart, 1997, p. 359의 43개국 자료.
- (3) 문화차원: Hofstede, 1991, pp. 26, 53, 84, 113; 차재호·나은영 역, 1995, pp. 52, 87, 128, 169의 53개국 자료.



부 록 B



(a) 표준편차가 작은 나라들



(b) 표준편차가 큰 나라들

그림 7. 1998년 CPI 자료를 도표화한 것 (각 나라의 상대적 위치와 표준편차)

## Cultural Dimensions and Interpersonal Trust Explaining National Transparency: A Secondary Analysis of 61 Countries' Common Data

Eun-Yeong Na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Sogang University

A secondary analysis was performed on 61 countries' data commonly obtained from (a) Transparency International's 1998 corruption perceptions indices for 85 countries, (b) Inglehart's (1997) interpersonal trust percentages for 43 countries, and (c) Hofstede's (1991) indices for four dimensions of culture (power distance, individualism-collectivism, masculinity-femininity, and uncertainty avoidance) for 53 countries. Main findings are (a) that 66% of variances in national transparency and 57% of variances in interpersonal trust were explained by the four dimensions of culture, and (b) that 45% of variances in national transparency were explained by interpersonal trust. Individualism was the most powerful dimension of culture in predicting national transparency, and power distance was the most efficient in predicting interpersonal trust. The higher the interpersonal trust score, the higher the transparency index. In addition, it was also found that interpersonal trust significantly mediated the effects of individualism and uncertainty avoidance on national transparency, while the effect of power distance was mostly direct on national transparency with little mediation of interpersonal trust. It was suggested that the habituation of high context communication style (which includes more guessing than accepting the expressed communication as it is), based on collectivism and authoritarianism, may work as an important factor interfering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arency.

key words : transparency, corruption, trust, culture, high context communication